

코로나19 위기와 한국인의 복지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Khaltar Odkhuu*
김 태 형**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역량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관리역량,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기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감염병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인식 수준에 따라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코로나19 대응평가 중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성이 복지확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역량의 경우 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 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정부의 규모와 기능의 확대를 기대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평가와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역량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역할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의 정부의 대응, 정부의 역량, 정부의 역할, 그리고 위험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위기에 대한 경험적 학습과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주제어: 복지태도,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 위험인식

I. 서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 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기능, 규모, 역할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미래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한국에서는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계기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논쟁이 수면 위로 올랐고,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

* 제1저자

** 교신저자

였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수혜 경험 및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수혜 경험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노인, 여성, 청년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있었던 노동자들이 타격을 크게 입으면서 복지정책의 취약성이 드러나 관련 정책 수요와 관심이 증대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백승호, 2020).

그러나 이처럼 코로나19 위기가 미래정부 역할에 대한 우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복지국가 미래를 추정하는 윤홍식(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담론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미래가 도래하든 국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와 지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위기 경험과 이에 대한 제도 학습의 관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제도에 대한 학습된 평가, 기능, 규모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 위기대응역량에 대한 학습된 평가와 전반적인 관리역량,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기대가 한국인의 복지확대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기대응역량으로서 재난지원금의 효과성과 방역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둘러싼 당위론적 정당성에 기초한 복지논쟁과 달리 위기대응주체인 정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학습된 견해를 토대로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황수경, 2019).

먼저, 정부의 위기대응역량과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복지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피드백 이론에 기반한 선행 연구들은 시민들의 정부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복지태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김태심, 2021). 이러한 평가는 구체적인 정책 경험에 기초한 평가와 포괄적인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로 나뉜다(김태심, 2021). 구체적인 관점에서 개인은 복지 서비스 수혜 경험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험적 학습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자신의 복지선호도에 반영할 수 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공공정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신뢰하는 것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지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수혜 경험과 이에 대한 평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복지선호에 반영될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기대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다가오는 경제침체의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시민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기를 원하게 되어 결국은 정부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기를 바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의 조치를 시행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규제

조치와 함께 피해를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펼쳤다. 사람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기를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와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 지원을 기대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지출의 규모 확대에 대해 지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계층화에 따른 소득의 상실, 실업 등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결국은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의 위험과 심각성을 높이 인지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부의 보호역할 혹은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경험이 한국인의 복지선호 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코로나19 위기와 복지태도

복지태도란 소득분배에 대한 개인들의 견해나 태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를 의미한다(황수경, 2019).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존의 정치학, 경제학적인 관점을 넘어서 위험과 정부역할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복지태도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침체와 같은 위기 경험이 복지선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담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Ares 외(2021)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여론이 그러한 충격에 반응하는 태도의 방식은 이동(shift), 안정성(stability), 양극화(polarization) 또는 수렴(convergence)으로 구분된다. 먼저 여론의 태도는 균일하게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경제학적 연구에 의하면 경제 위축은 시민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좌익(left)으로 이동시키고 사회지출에 대한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Blekesaune, 2007; Margalit, 2013; Naumann et al., 2016). 둘째, 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태도가 신념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경우이다. 대공황과 같은 큰 경제충격의 경우에도 대규모 태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는 주장도 있다(Margalit, 2019). 셋째, 태도가 중심에서 극단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그때 양극화가 발생한다(Fiorina & Abrams, 2008).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들은 위기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전 성향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Taber & Lodge, 2006). 마지막으로, 위기에 대한 공유된 경험은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¹⁾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태도 수렴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도자를 더 신뢰하고, 정부정책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1) 미국 정치학자 존 물러가 1970년 '트루먼에서 존슨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지지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위기사태는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사회지출 등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정부의 규모와 정부 기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도 변화의 양상은 다양한 유형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보호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관련 정책에 관한 관심이 증대된다. 이를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하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노인, 여성,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비중과 관련 피해 및 소득 지원정책의 수요와 관심이 증대된 것이다. 즉,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역할 혹은 소득재분배 정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책학습의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Ares 외(2021)는 위기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복지국가인지 여부가 조절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인 복지국가와 복지정책이 있는 경우 복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비춰 보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및 정책이 있고, 시민들이 이를 경험적 학습을 통해 그러한 것으로 평가할 때 복지선호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제공된 정책학습 기회를 통해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위기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정치학(Cusack et al., 2006; Gingrich & Ansell, 2012; Iversen & Soskice, 2001; Rehm, 2009), 사회학(Svallfors, 2002) 및 경제학(Alm & Torgler, 2006)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Barnes, 2015). 한국에서 복지태도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후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복지정책 선호(김수완 외, 2014; 신현중, 2013), 복지태도(김윤태 외, 2013; 류진석, 2004; 양재진 외, 2021; 양종민, 2020; 조남경, 2017), 복지인식(이흥기·박영준, 2015), 복지의식, 복지확대 태도(금종예·금현섭, 2017; 이현우·박시남, 2016), 재분배정책 선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 성향, 계급·계층에 대한 이해, 불평등에 대한 이해 등 개인의 이익과 신념이 복지확대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 복지수혜 경험, 복지만족도 등 복지인식과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질, 정부신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지호·황아란, 2016).

코로나19 위기와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로는 윤홍식(2020)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복지국가 미래를 추정하는 연구가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네 가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정책적 수요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고, 위기와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역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복지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과 같은 정책적 수요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역량, 전반적인 관리역량,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정부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와 복지태도

정부 정책은 국민의 행태와 태도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정책효과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 Schattschneider(1935)의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정치를 만든다”라는 유명한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정책피드백 이론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정책피드백 이론에 따르면, 정책의 설계, 자원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한편 정책이 개인에게 정치적 참여를 자극하는 수단과 유인책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집행에 대한 경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와 자신을 바라보는 특정 방식과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갖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인책(resource effects)과 해석적 효과(interpretive effects)는 개인의 정부에 대한 태도와 행태에 변화를 가져온다(Pierson, 1993). Pierson(1993)은 이를 “결과가 원인이 될 때”라는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개인들의 해석적 관점이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소득지원 정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정책이 개인에게 관련 정책을 숙의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수혜 경험과 이에 대한 평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가 향후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복지선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재난지원금의 효과성과 방역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과 소비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대응정책이었다(정광호 외, 2021; 문진영·유미선, 2021 재인용). 정책의 설계, 집행, 효과는 복지정책과 유사하였고, 기본소득 논쟁의 출발점이 될 만큼 개인의 복지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논의되었다. 문진영·유미선(2021)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복지선호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 개인의 재난지원금 수혜 경험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효과로 작용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남윤민(2021)은 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경험에 대한 평가가 복지지출의향, 복지증세, 기본소득, 기본소득증세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효과가 소득계층, 정치적 이념, 그리고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방역정책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부 평가의 장을 열어주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강도와 범위 내에서 적용되었을 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대응하였고, 코로나19의

심환자에 대한 대응정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정책, 사적 모임 집합금지 정책이 핵심을 이루었다. 정부의 방역정책은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행태와 소득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복지선호에 대한 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은 보건목표와 경제목표 중의 어느 한쪽을 희생하지 않고 상생적 경로를 따를 때만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복지선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방역정책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김태심(2021)의 연구가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방역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저소득층보다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속하는 집단에서 강력하게 나타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방역정책에 대한 경험과 해석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1.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3. 정부의 역량과 복지태도

대부분의 전통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국가가 복지정책을 쉽게 시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재분배를 정치적 의제로 두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Rothstein 외(2012)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며 복지지출과 정부의 역량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역량과 사회지출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명하고 유능하며 공정한 국정운영은 국민이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그 원리는 복지확대와 소득분배는 과세로 확보한 수입을 세출을 통해 재분배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와 미래복지에 대한 책임을 관리하는 정부가 그것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신뢰할 때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근거에 의존한다. Svallfors(2013)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신뢰하는 시민들은 높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고, 관대한 사회복지 지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반대로 국민은 정부를 불신할 때 경제적 불평등이 용납될 수 없다고 믿으면서 복지국가의 확대에 저항하게 된다(Gilley, 2006; Seligson, 2002; Skocpol, 1992). 따라서 재분배를 위한 정치적 동원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관리역량과 연결된다.

정부의 관리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시민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고,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정부가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만 정부를 신뢰하고 복지정책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 김태심(2021)은 정부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지만, 시민들은 정부라는 큰 틀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부 활동과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의 관리역량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

다(Andrews & Boyne, 2010). 일반적으로 관리역량은 정부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Farazmand, 2004), 의사결정과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능력(Bowman & Kearney, 1988), 인력과 행정구조를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Ingraham & Donahue, 2000),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정부의 관리역량이 국민의 복지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현우·박시남(2016)은 복지태도 연구에 있어 정부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연구에서는 개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호·황아란(2016)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관리역량으로서 정부의 과제 해결 능력,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복지확대를 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결과는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 따라 달라졌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역량으로서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현우·박시남(2016)은 이에 대해 “국가는 시민들을 살피고 효율적인 경우에만 시민들은 관료의 손에 그들의 복지를 맡긴다”라고 하였다. 효율성은 정부신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은 시민들의 복지확대와 복지를 위한 증세 태도에서도 중요하다. 복지정책은 재원이 세금으로부터 마련되고 정부에 의해 정책수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고 인식할수록 복지를 지지하고 조세저항도 적을 수 있다.

가설 2. 정부역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정부의 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2. 정부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4. 정부의 역할과 복지태도

개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정부활동의 범위, 정부의 규모, 정부개입에 대한 태도로부터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정부활동 범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다양한 활동분야에 관한 태도이고, 정부규모는 정부지출의 축소와 확대에 대한 태도이며, 정부개입은 정부와 시장, 민간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기능 범위의 강도에 관한 것이다(박종민·왕재선, 2004). 그러나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외 연구로는 Borre & Scarbrough(1995)의 정부활동과 정부관여의 개념 분류를 통해 정부역할을 개념화한 연구가 있고 국내 연구로는 박종민(2008)의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가 있다. 박종민(2008)은 한국사회의 정부역할에 대한 논쟁은 경제개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국가, 복지공급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 경제와 복지 모두에서 정부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신자유국가 모형 간의 투쟁이라고 할 만큼 항상 갈림길에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종민, 2008).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

지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정치적 이념이라는 측면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졌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있어 국민의 정부규모 및 정부기능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그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가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사회구조와 정치적 이념에 관련된 개념이다. 사회구조 관점에서 개인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정부역할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정부활동범위와 정부관여의 정도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인다(박종민·왕재선, 2004). 이는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와 혜택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치이념에 대한 관점에서 개인의 정부활동과 정부관여에 대한 태도는 좌파 혹은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종민, 2008). 그러나 정치성향은 긴 시간 동안 형성되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중대한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역할에 대한 인식 및 관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박선경·신진옥, 2021). 따라서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를 정치이념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기와 같은 환경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념과는 구별해서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정부규모에 대한 태도와 정부 기능적 개입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3.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정부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5. 감염병 위험인식의 조절효과

개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였다는 분석들도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험인식 수준과 피해가 다름을 나타낸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에 대해서 개인이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는 개인의 정부보호 기능에 대한 태도, 더불어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선경·신진옥(2021)은 코로나19가 야기하는 국민의 피해 수준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측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관련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경험이 코로나19 시대 국가책임과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위험과 피해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증세와 경제격차를 해소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보건위기는 전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직면한 상황이지만, 국민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피해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취

해짐에 따라 실업, 근무 형태 변화, 소득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많고, 이에 따른 피해 수준은 부문별로 직업, 고용형태, 학력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재난 불평등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인식의 복지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개인의 이러한 위험인식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결과변수인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에 대한 위험인식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간의 조절효과를 통해 그러한 차이에 따른 복지태도의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감염병 위험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위험과 복지국가 관련 이론, 미시적인 측면에서 건강행동이론(health behavior chang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위험과 복지국가 이론에서는 산업 혁명 이후, 사회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출현을 옹호하였다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위험 부담을 개인에서 사회수준으로 옮기고, 위급하거나 필요할 때 대중을 보호한다. 복지국가 학계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재분배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업, 노년, 질병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에 관련 이론에 따르면 위험은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은 소득지원정책 및 피해 지원정책 등 사회보장정책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미시적인 수준에 적용하면 개인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을 높게 인지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고 복지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건강행동이론에 따르면, 더 큰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보호 행동을 더 기꺼이 이행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수 있다(Fischhoff, 2013; Rosenstock, 1974; Rogers, 1975; Bruine de Bruin et al., 2020 재인용). 하지만 감염병 위험인식이 낮은 개인의 경우 위험인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위험에 대해 부담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복지확대정책에 대해 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와 복지확대 태도간의 관계에서 감염병에 대한 높은 위험인식은 위험을 완화하고, 책임을 사회적 보장정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강화할 수 있다. 즉, 감염병에 대한 개인의 위험인식이 높을 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데, 이는 위험인식이 높을 때 사회보장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높게 인식하여 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부역량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감염병에 대한 높은 위험인식으로부터 형성되는 개인의 국가 보호역할에 대한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개인이 감염병 위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을 때 정부가 효율적이고 유능하다고 믿는다면 사회보장정책을 지지하는 태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과 복지확대 태도간의 관계에서도 개인의 감염병에 대한 높은 위험인식은 기존의 개인에게 형성된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가설 4-1. 개인의 복지확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평가의 효과는 감염병 위험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2. 개인의 복지확대에 대한 정부역량의 효과는 감염병 위험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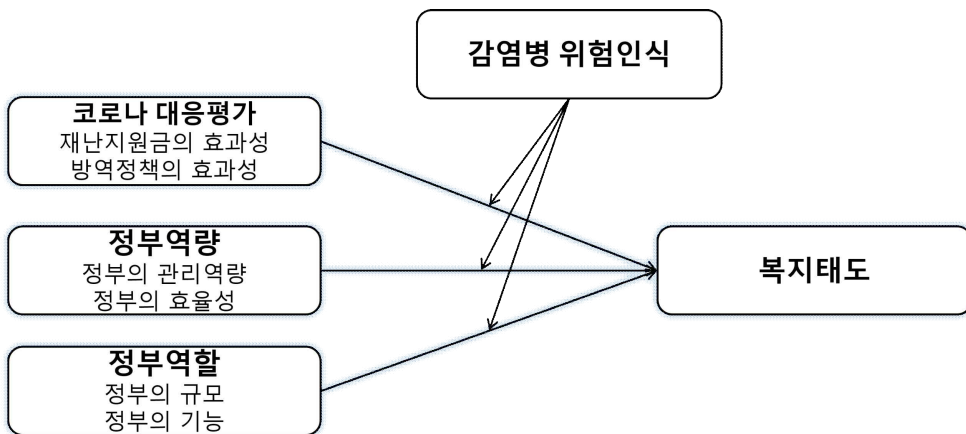
가설 4-3. 개인의 복지확대에 대한 정부역할의 효과는 감염병 위험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건위기에 대한 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 위험에 대한 인식이다. 코로나19 대응평가는 재난지원금의 효과성과 방역정책의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부역량은 관리역량과 정부의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하며, 정부역할의 경우 정부의 규모 및 기능에 대한 인식으로 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개인의 복지태도로 정의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이며, 조절변수는 개인의 감염병에 대한 위험인식의 수준이다.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초변화 사회의 미래정부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21년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 기관에서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만 20세 이상에 해당하는 성인인 일반 국민이고,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활용해 표본추출을 하였다. 조사결과 총 1,000명의 응답자로부터 유효한 설문 결과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일반 국민 1,000명의 설문조사자료를 연구데이터로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정부의 활동, 정부의 역량, 미래정부에 대한 인식,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 코로나19 대응정책평가, 정부신뢰, 현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 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연구 대상 설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 특성을 보면, 20대부터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 60대 이상이 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50대가 20%, 40대가 19.4%, 30대가 16%, 20대가 15.7%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 여성이 505명으로 50.5%, 남성이 495명으로 49.5%를 구성하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은 31.2%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서울이 19.1%, 부산/울산/경남이 15.3%, 대전/세종/충청이 10.5%, 광주/전라가 9.9%, 대구/경북이 9.7%, 강원/제주가 4.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소득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소득분포는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이 응답자의 24.8%, 400만원 미만이 19.1%, 300만원 미만이 17.2%, 500만원 미만이 15.7%, 600만원 미만이 10.2%, 200만원 미만이 6.8%, 100만원 미만이 3.8%, 50만원 미만이 2.4%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총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7%가 4년제 대졸 이하, 19.7%가 고졸 이하, 12.1%가 대학원 졸업 이상, 10.5%가 2년제 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 응답자들의 표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분석 방법으로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서열로짓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와 연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분석 도구로는 STATA 15.1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		빈도(명)	비율(%)	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157	15.7	소득	50만원 미만	24	2.4
	30대	160	16		100만원 미만	38	3.8
	40대	194	19.4		200만원 미만	68	6.8
	50대	200	20		300만원 미만	172	17.2
	60대 이상	289	28.9		400만원 미만	191	19.1
성별	남성	495	49.5		500만원 미만	157	15.7
	여성	505	50.5		600만원 미만	102	10.2
					600만원 이상	248	24.8

학력	고졸 이하	197	19.7	지역	서울	191	19.1
	2년제 대졸 이하	105	10.5		인천/경기	312	31.2
					대전/세종/충청	105	10.5
	4년제 대졸 이하	577	57.7		광주/전라	99	9.90
	대학원 졸업 이상	121	12.1		대구/경북	97	9.7
부산/울산/경남				153	15.3		
			강원/제주	43	4.3		

3. 측정 변수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로 활용한 측정지표는 다음의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첫 번째로, 종속 변수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로, “귀하께서는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4점 척도(1점: 소득분배가 경제성장보다 매우 중요하다, 2점: 소득분배가 경제성장보다 중요한 편이다, 3점: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보다 중요한 편이다, 4점: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보다 매우 중요하다)로 구성하였다.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소득분배가 경제성장보다 매우 중요하다’를 가장 높은 4점으로 재설정하였다.

둘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는 재난지원금의 효과성과 방역정책의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은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의 경제적인 삶의 질과 심리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5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를 통해 조사하였다. 방역정책의 효과성은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가격리, 입국제한 조치, 확진자 동선 공개, 선별진료소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5부제, 백신확보,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주요 방역정책 수단에 대한 평가를 리커트 5점 척도(1점: 매우 잘못하고 있다-5점: 매우 잘하고 있다)로 측정하였다.

셋째, 정부의 역량은 관리역량과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정부 관리역량과 효율성은 각각 7개와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리역량은 “인사관리, 성과관리, 규제관리, 갈등관리, 정보관리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5점: 매우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효율성은 “정부의 비용 절감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노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5점: 매우 동의함)를 통해 측정하였다.

넷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규모와 정부의 기능 확대에 대한 선호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각각 5점 척도의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정부 규모(공무원 수, GDP 대비 정부예산 등) 및 정부와 시장, 민간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기능 범위”에 대해 현재보다 축소 혹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지를 통해 측정하였다(1점: 현재보다 매우 축소되어야 한다-5점: 현재보다 매우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험인식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종 질병 및 전염병 취약성”에 대한 평가로,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1점: 매우 낮음-5점 매우 높음)를 통해 측정하였다.

〈표 2〉 변수의 측정

구분	측정변수	설문 내용
복지태도	소득분배 선호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코로나19 대응평가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재난지원금의 심리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
	방역정책의 효과성	자가격리에 대한 평가 수준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평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평가
		선별진료소에 대한 평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평가
		마스크 5부제에 대한 평가
		백신 확보에 대한 평가
		코로나19 관련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평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평가
영업금지에 대한 평가		
공공 교통수단 시간 제한에 대한 평가		
학교 등교 금지에 대한 평가		
정부의 역량	관리역량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
		정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구축
		정책의 일관성 정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개 정도
		정부의 각 분야(노사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환경갈등 등)에 대한 갈등관리 수준
		정부의 독과점이나 소비자 보호 등 시장규제의 적절한 활용 정도
	효율성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정책 홍보 수준
		정부의 비용 절감 노력
정부의 역할	정부의 기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노력
		공무원 수, GDP 대비 정부예산 등 정부규모에 대한 선호도
정부의 역할	정부의 기능	정부와 시장, 민간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기능 범위에 대한 선호도
		위험인식
인구통계학적 특징	성별	여성(0) / 남성(1)
	연령	개인 연령
	학력	고졸 이하(1)/2년제 대졸 이하(2)/4년제 대졸 이하(3)/대학원 졸업 이상(4)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1)/200-400만원 미만(2)/400-600만원 미만(3)/600만원 이상(4)
	혼인 상태	미혼(0) / 기혼(1)
	정치성향	매우 보수적(1)/ 중도(3)/ 매우 진보적(5)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복지태도를 제외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 정부역량, 정부역할, 위험인식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기에 평균값이 높을수록 효과성, 역량, 정부역할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위험인식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균값을 통해 비교했을 때, 감염병에 대한 위험인식의 평균값이 3.8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성(3.413), 마지막으로 방역정책의 효과성(3.322)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위험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을 봤을 때 정부의 규모보다 정부기능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역량의 경우 다른 독립변수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표 3> 기술통계 결과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복지태도	1000	2.481	.799	1	4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1000	3.413	1.006	1	5
방역정책의 효과성	1000	3.322	.816	1	5
관리역량	1000	2.65	.845	1	5
효율성	1000	2.407	1.046	1	5
정부의 규모	1000	2.63	1.011	1	5
정부의 기능	1000	2.925	.951	1	5
위험인식	1000	3.897	.854	1	5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복지태도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방역정책의 효과성, 관리역량, 효율성, 정부의 규모, 정부의 기능 등 주요 변수들이 복지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인식이 복지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복지태도	1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245*	1						
방역정책의 효과성	.219*	.546*	1					
관리역량	.228*	.469*	.603*	1				
효율성	.291*	.487*	.612*	.790*	1			
정부의 규모	.301*	.312*	.378*	.540*	.537*	1		
정부의 기능	.285*	.369*	.341*	.431*	.432*	.506*	1	
위험인식	-.084*	.062	.069*	-.114*	-.099*	-.108*	-.071*	1

주1) 유의수준: * $p < 0.05$

3. 서열로짓 분석결과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의 정부에 대한 평가,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감염병에 대한 위험인식의 복지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열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기초모형 분석(모형1), 조절효과 모형분석(모형2, 모형3, 모형4)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모형 1〉은 독립변수들과 더불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함께 분석한 모형이다. 분석결과 코로나19 대응평가 중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성이 복지확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역정책에 대한 효과성은 복지확대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역량의 경우에는 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 설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결과였으며, 정부가 충분한 관리역량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있어서 경제를 희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역량 중 정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낭비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부의 규모 및 정부 기능의 확대를 기대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들이 현 사회 지위에서 경험상 더 포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필요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인식이 바로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평가와 위험인식 간의 조절효과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모형 2〉이다. 분석결과, 코로나19 대응평가와 위험인식 간의 복지확대 태도에 대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이외의 영향요

인들의 효과는 <모형 1>과 유사하였다.

셋째, 정부역량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분석결과는 <모형 3>이다. 분석결과, 이번 모형에서 주요 독립변수들이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1>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역량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역할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분석결과는 <모형 4>이다. 분석결과, <모형 4>에서 주요 독립변수들이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역할과 위험인식을 제외하고 <모형 1>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부의 역할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서열로짓 분석결과

구분	변수	모형 1 (기초)		모형 2 (조절효과)		모형 3 (조절효과)		모형 4 (조절효과)	
		Coef.	O.R	Coef.	O.R	Coef.	O.R	Coef.	O.R
코로나19 대응평가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0.222***	1.249	-0.0531	0.948	0.225***	1.252	0.2215***	1.247
	방역정책의 효과성	0.0652	1.067	-0.142	0.867	0.0640	1.066	0.065	1.067
정부역량	관리역량	-0.249*	0.780	-0.247*	0.781	-0.245*	0.783	-0.255**	0.775
	효율성	0.269**	1.309	0.275***	1.317	0.266**	1.305	0.279***	1.322
정부역할	정부의 규모	0.257***	1.293	0.258***	1.295	0.266***	1.305	-0.377	0.686
	정부의 기능	0.285***	1.330	0.277***	1.319	0.271***	1.311	0.598	1.818
위험인식	위험인식	-0.132*	0.876	-0.536*	0.585	-0.227	0.797	-0.339	0.713
코로나19 대응평가의 조절효과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위험인식			0.0712	1.074				
	방역정책의 효과성*위험인식			0.0503	1.052				
정부역량의 조절효과	관리역량*위험인식					-0.251*	0.778		
	효율성*위험인식					0.314***	1.368		
정부역할의 조절효과	정부의 규모*위험인식							0.165**	1.179
	정부의 기능*위험인식							-0.081	0.92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남성)	0.247**	1.280	0.238*	1.268	0.222*	1.249	0.241*	1.272
	연령	-0.0338	0.967	-0.0353	0.965	-0.0441	0.957	-0.039	0.962
	학력	-0.0403	0.960	-0.0379	0.963	-0.0481	0.953	-0.038	0.963
	소득수준	-0.156**	0.855	-0.156**	0.855	-0.151**	0.860	-0.163**	0.849
	혼인 상태	-0.312*	0.732	-0.302*	0.740	-0.320*	0.726	-0.299*	0.742
	정치적 성향	0.581***	1.788	0.581***	1.789	0.590***	1.804	0.575***	1.778
	N	1,000		1,000		1,000		1,000	
	LR chi ²	222.94		225.00		231.41		226.91	
	Sig	0.0000		0.0000		0.0000		0.0000	
	Log Likelihood	-1071.0962		-1070.0643		-1066.8625		-1069.1136	
	Pseudo R ²	0.0943		0.0951		0.0978		0.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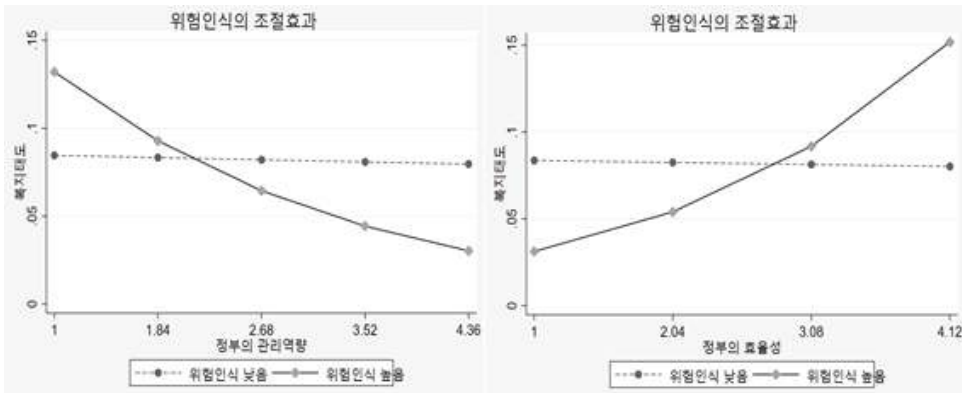
주1) 유의수준: * p < 0.10, ** p < 0.05, *** p < 0.010

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한 위험인식의 조절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이 지각하는 위험인식이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관리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인식이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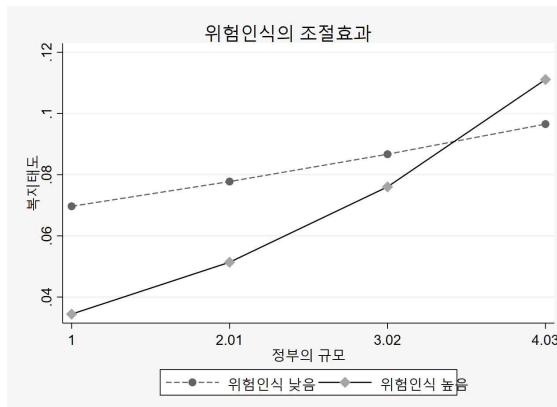
도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해 신뢰하는 경우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 효율성의 경우,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인식이 복지확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부의 효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감염병에 대해 인식하는 위험 수준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인식이 바로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정부와 효율성을 갖춘 정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모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높은 위험인식을 갖고 있는 개인의 경우 크게 나타났고, 반면 낮은 위험인식을 갖고 있는 개인의 경우 정부규모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가설 1-1>, <가설 2-2>는 모든 모형에서 채택되고, <가설 3-1>, <가설 3-2>는 <모형4>를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채택되지만 <가설 1-2>,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조절효과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가설 4-1>은 기각되고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4-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림 2> 정부역량과 복지확대 태도에 있어서 위험인식의 조절효과



<그림 3> 정부역할과 복지확대 태도에 있어서 위험인식의 조절효과



I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0년 이후로 무상급식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재난지원금 경험으로 촉발된 기본소득에 대한 복지논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양재진, 2020).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능의 확대 및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인 예산지출의 확대,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경험은 복지확대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홍식(2020)은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첫째, 코로나19로 확대되었던 국가역할이 안정화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둘째,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부활하는 것, 셋째, 포퓰리즘의 확대에 따른 권위주의와 연계되는 복지국가가 출현하는 것, 넷째, 새로운 힘들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국가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복지국가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뤄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정부 위기대응역량에 대한 학습된 평가와 전반적인 관리역량,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기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코로나19 대응평가 중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성이 복지확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역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복지확대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피드백 이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의 경험은 개인들에게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정부에 대한 태도 변화 즉, 복지확대 태도로 이어졌다. 한편 방역정책은 보건목표와 경제목표 간의 균형이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방역정책의 효과성을 보건목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은 좀 더 경제목표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심(2021)의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관련 연구에서는 저소득층보다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가 복지정책 지지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방역정책의 효과와 정부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보건목표와 경제목표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소득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역량의 경우에는 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결과였으며, 정부가 충분한 관리역량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있어서 경제를 희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역량 중 정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낭비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현우·박시남(2016)의 “국가는 시민들을 살피고 효율적인 경우에만 시민들은 관료의 손에 그들의 복지를 맡긴다”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부의 규모 및 정부 기능의 확대를 기대할수록 복지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들이 현재 사회 지위에서 경험상 더 포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필요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정부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가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태도로 이어진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인 이념보다 위기를 겪으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위험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코로나19 대응평가와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정부역량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와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지각하는 위험인식이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관리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인식이 복지확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부의 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위험인식이 높아도 정부의 관리역량이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현재 수준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효율성의 경우, 정부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정부 효율성과 복지확대 태도 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정부규모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복지확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위험인식이 낮을 때보다 위험인식이 높을 때 강화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역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방역정책의 보건목표와 경제목표에 대한 포괄적인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방역성과와 경제성과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확대 태도에 대해서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를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염병에 대한 위험인식뿐만 아니라 경제위험인식, 환경위험인식 등 위험 유형에 따른 결과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식조사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타당도 확보에 대한 잠재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및 관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행정학 연구에서도 인식조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George & Pandey, 2017). “예측 변수와 기준 변수 모두가 개인의 인식을 포착할 때, 신념, 판단 또는 감정 설문조사가 적절한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존재한다(Podsakoff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인식조사 도구로써 개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행정학 분야에서 인식조사 연구는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책활동에 대한 대중의 우선순위 파악, 현재 정책 영향에 대한 평가,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견해 평가,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 파악, 정책 집행을 위한 전략 개선 등 공공정책의 입안, 정책 평가, 정책 형성, 정책 집행 과정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Dowler et al., 2006).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도 근본적으로 특정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치를 강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 정책(조약, 규정, 세금, 보조금 등)에 대한 대중의 지지 또는 반대는 지구 기후 변화의 위험과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Leiserowitz, 2006).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정부의 역량과 역할 및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평가가 국민의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중예·금현섭. (2017).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1-29.
- 김수완·김상진·강순화. (2014).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67-90.
-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김태심. (2021). 코로나19와 복지 태도: 정부 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4(1): 137-167.
- 남윤민. (2021).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복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7(2): 177-204.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문진영·유미선. (2021). 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성별에 따른 정책 효능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4): 29-55.
- 박선경·신진욱. (2021). 코로나 19 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 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7(1): 153-189.
- 박종민. (2008).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2(4): 269-288.
- 박종민·왕재선. (2004).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문화론적 설명. 「한국행정학보」, 38(4): 43-63.
- 백승호. (2020). 긴급재난지원금이 남긴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261): 24-31.
- 신현중. (2013).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 대응성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22(3): 201-234.
- 양재진. (2020).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월간 복지동향」, 261:12-17.
- 양재진·장우윤·윤성원. (2021).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예산정책연구」, 10(2): 1-28.
- 양종민. (2020). 한국 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정부의 책임성, 증세, 조세시스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79-112.
- 윤희식. (2020).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 과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길 '들'. 「비판사회정책」, (68): 113-142.

- 이지호·황아란. (2016).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257-285.
- 이현우·박시남. (2016).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이익을 넘어서. 「Oughtopia」, 31(1): 267-298.
- 이흥기·박영준. (2015).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치태도와 교육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8): 362-397.
- 정광호·이재용·윤재원. (2021). COVID-19 팬데믹과 재난지원금 연구-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7(3): 1-23.
- 조남경. (2017). 복지태도의 세대 간 균열 연구: 연령효과와 분리된 코호트 효과와 그 요인의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245-275.
- 황수경.(2019).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와 정책 결정」.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Alm, J., & Torgler, B. (2006). Culture differences and tax moral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2): 224-246.
- Andrews, R., & Boyne, G. A. (2010). Capacity,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esting the black box model of public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3): 443-454.
- Ares, M., Bürgisser, R., & Häusermann, S. (2021). Attitudinal polarization towards the redistributive role of the state in the wake of the COVID-19 crisis.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31(sup1): 41-55.
- Barnes, L. (2015). The size and shape of government: preferences over redistributive tax policy. *Socio-economic review*, 13(1): 55-78.
- Blekesaune, M. (2007).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393-403.
- Borre, O., & Scarbrough, E. (Eds.). (1995). *The scope of government* (Vol. 3).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owman, A. O. M., & Kearney, R. C. (1988). Dimensions of state government capability.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1(2): 341-362.
- Bruine de Bruin, W., Saw, H. W., & Goldman, D. P. (2020). Political polarization in US residents' COVID-19 risk perceptions, policy preferences, and protective behaviors.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61(2): 177-194.
- Cusack, T., Iversen, T., & Rehm, P. (2006). Risks at work: The demand and supply sides of government redistribut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3): 365-389.
- Dowler, E., Green, J., Bauer, M., & Gasperoni, G. (2006). *Assessing public perception: Issues and methods. Health hazard and public debate: lessons for risk communication from BSE/CJD saga*.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40, 60.
- Farazmand, A. (2004). Innovation i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building capacity

- in the age of globalization. *Public Organization Review*, 4(1): 3-24.
- Fiorina, M. P., & Abrams, S. J. (2008).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563-588.
- Fischhoff, B. (2013).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In *Risk analysis and human behavior* (pp. 17-46). Routledge.
- George, B., & Pandey, S. K. (2017). We know the Yin—But where is the Yang? Toward a balanced approach on common source bias in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hip.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7(2): 245-270.
- Gilley, B. (2006). The meaning and measure of state legitimacy: Results for 72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5(3): 499-525.
- Gingrich, J., & Ansell, B. (2012). Preferences in context: Micro preferences, macro contexts, and the demand for social poli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12): 1624-1654.
- Ingraham, P. W., & Donahue, A. K. (2000). Dissecting the black box revisited: Characterizing government management capacity. *Governance and performance: New perspectives*, 292-318.
- Iversen, T., & Soskice, D.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75-893.
- Leiserowitz, A. (2006).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affect, imagery, and values. *Climatic change*, 77(1): 45-72.
- Margalit, Y. (2013). Explaining social policy preferences: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7(1): 80-103.
- Margalit, Y. 2019. Political Responses to Economic Shock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277-95.
- Naumann, E., Buss, C., & Bähr, J. (2016). How unemployment experience affects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 real panel approach.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2(1): 81-92.
- Pierson, P. (1993). When effect becomes cause: Policy feedback and political change. *World politics*, 45(4): 595-628.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 Podsakoff, N. P. (2012). Sources of method bias in social science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on how to control i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3(1): 539-569.
- Rehm, P. (2009). Risks and redistribution: An individual-leve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7): 855-881.
- Rosenstock, I. M.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4): 354-386.
- Rogers,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1. *The journal of psychology*, 91(1): 93-114.
- Rothstein, B., Samanni, M., & Teorell, J. (2012). Explaining the welfare state: power resources

- vs. the Quality of Government.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1): 1-28.
- Schattschneider, E. E. (1935). *Politics, pressures and the tariff*. New York: Prentice-Hal.
- Seligson, M. A. (2002). The impact of corruption on regime legitimacy: A comparative study of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journal of Politics*, 64(2): 408-433.
- Skocpol, T. (1992). *Protecting soldiers and mothers: The politics of social provision in the United States, 1870s-1920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vallfors, S. (2002).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unpacking a supposed relationship. In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pp. 184-205).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vallfors, S. (2013). Government quality, egalitarianism, and attitudes to taxes and social spending: a European comparison.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363-380.
- Taber, C. S., &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3): 755-769.

Odkhuu Khaltar: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21교육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관리, 성과, 조직행태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Effects of ethics and performance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2020), "여성 요양보호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성희롱 피해 경험이 이직의도와 결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20), "What Motivates Local Governments to Be Efficient? Evidence from Philippine Cities"(2022) 등이 있다 (odkhuukh@yonsei.ac.kr).

김태형(金泰亨):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2020)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초청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부의 내부 관리역량과 외부 관리역량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2021),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직 목표제 도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2021), "공공조직 내에서의 조직정치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침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연구관심분야는 조직/인사, 정책수단, 지방정부, 성과 등이다(taehyung@kipa.re.kr).

Abstract

Covid-19 Crisi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Covid-19 Response Evaluation, Government Capacity, and Role of the Government

khaltar, Odkhuu

Kim, Taeh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following factors towards public welfare attitudes: the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Covid-19 crisis response, the government managerial capacity,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efficiency, and the expectation on the size and scope of the government. Moreover,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effect of Covid-19 crisis response evaluation, government capacity, and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government on welfare attitude changes depending on the perceived risk perception level for infectious diseas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first, the effectiveness of the disaster relief fun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welfare attitude, but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quarantine policy did not affect the welfare attitude. Second, interestingly, in the case of government capacity, it was observed that managerial capacit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welfare expansion. Third, in the case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expectations for the size and scope of the government were related to positive attitudes toward welfare policies. Finally, it was found that risk perception had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vid-19 response evaluation and the attitude to expand welfare, whereas it was found that risk percep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apacity and the attitude to expand welfar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risk perception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role and welfare attitude.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toward crisis and welfare attitude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Welfare Attitude, Covid-19 Response Evaluation, Government Capacity, Government Role, Risk Perception